

# 가상화폐 법제화 될까...국회, 토론회 · 법안 발의 '붐물'

###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 TF,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오늘 국회입법조사처 '가상통화 규제 · 개선 토론회' 예정 여 · 야 의원들 잇달아 가상화폐 제도화 추진 주장 힘실어

최근 국회에서 가상화폐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이 잇달아 열리고, 복수의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가상화폐 법제화 가능성에 대한 시장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 TF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상화폐 제도화 방식을 두고 토론을 했다.

이튿날인 8일에는 국회입법조사처 주재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에서도 이미 한 차례 이상의 가상화폐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회 정부위원회 여당 간사 이화영 의원은 지난 5일 '암호통화의 경제적 의미와 정책대응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상화폐를 금융투자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 과세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달 30일 '가상통화거래 입법과 정책토론회'를 열고 가상통화 양성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심기준 의원 역시 지난 19일 '가상(암호)화폐, 투기 대책과 기술혁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 바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지난달 15일 '비트코인 논란, 가상화폐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의원들의 입법 열기도 뜨겁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전날 암호통화에 대한 정의와 거래소 등록, 이용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정태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인가와 투자자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가장 먼저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사람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으로, 지난해 7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고 거래소 인가제를 실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밖에도 민병두 민주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등도 가상



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 역시 가상화폐 거래소에 지급세탁방지 의무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의 입법을 추진

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통화와 관련해 정부가 거래를 일부러 억제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없다"며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도)

앞으로 자금세탁 방지 장치를 갖춰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스

## 비트코인 6000달러선 붕괴...두달새 217조원 증발

### 2만달러 접근했던 12월 대비 70% 떨어져



가상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이 날개 없는 추락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2만 달러 가까이

시가총액은 불과 두 달도 채 안 된 기간 동안 2000억 달러(약 217조 6000억원)가 줄어들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 시간) 가상화폐 가격정보 사이트인 코인데스크를 인용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5947.40달러까지 떨어졌다면 이같이 보도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최고점인 2만 달러 가까이 치솟던 지난 12월에 비해 70% 정도 떨어졌다. WSJ는 지난 두 달 동안 비트코인 시총에서 증발한 2000억 달러는 시티그룹 전체 주가의 시총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전했다.

WSJ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급락의 원인은 글로벌 규제 당국의 규제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통화 책임자들의 발언도 가상화폐를 압박하고 있다.

이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은 6일 독일 괴테 대학 연설에서 '비트코인은 거품과

폰지 사기, 환경 재앙 등의 복합체(combination of a bubble, a Ponzi scheme and an environmental disaster)"라고 일갈했다. 카르스텐스 총장은 비트코인을 환경재앙으로까지 언급한 것은 이를 채굴하는 데 엄청난 양의 전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는 이어 "암호화폐가 화폐인 척하고 있지만 화폐의 기본 정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가치의 척도로 가능할 수 없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카르스텐스 총장은 화폐가 기존 금융 시스템에 의존해 운영되는 문 제도 지적했다. 그는 "지금 수단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비트코인은 '산소마스크'(상업은행 계좌)를 통해 공급된 산소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암호화폐 거래가 불법적인 데 활용되면 금융 당국과 중앙은행이 이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당국이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가상화폐는 주요 금융시스템과 더욱 복잡하게 얽기면서 금융 안정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5일 유럽의회에 출석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는 규제받지 않는 매우 위험한(very risky) 자산이다. 큰 변동성에 노출돼 있다"라고 경계했다.

그는 이어 "ECB 내 은행 감독기 구에서 이런 디지털 자산이 감독기 관에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뱅크오브 아메리카(BOA)와 JP모건 등 미국 주요 은행과 카드사가 신용카드를 통한 암호화폐 매입을 금지한 데 이어 영국 최대 은행인 로이즈뱅크그룹도 동참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정보업체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6000달러일 경우 비트코인의 시총은 1090억 달러(약 118조원) 정도가 된다. 이는 전체 가상화폐 시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이제까지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비트코인은 1년전까지만 해도 전체 가상화폐 시총의 85%를 차지했었다.

### "가상화폐는 폰지사기 금융안정성 위협해"

국제결제은행(BIS)의 이구스틴 카르스텐스 총재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폰지 사기'로 비난하면서 "금융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6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카르스텐스 총재는 이날 오전 독일 괴테대학교에서 가진 연설에서 '비트코인은 거품(버블)과 폰지 체계, 그리고 환경 재앙을 합쳐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다.

그는 "각국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을 엄중단속(clamp down)하고, 가상화폐들이 주류(금융)기관들에 편승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하며,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스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